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

일시 : 2004년 6월 17일 (목) 14:30 ~ 17:00

장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프 로 그 램

■ 14:00~14:30 ▶ 등 록

■ 14:30~14:40 ▶ 개 회 식

개회사 :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 14:40~15:20 ▶ 주제발표

주제발표 : 유기영(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5:20~15:30 ▶ 휴 식

■ 15:30~17:00 ▶ 지정토론 및 방청객 토론

사회자 : 김갑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 김경술(서울시의회 의원)

김규억(농림부 가축방역과 사무관)

서상현(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상근이사)

조희경(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최지용(한국애견협회 이사)

홍수열(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팀장)

■ 17:00 ▶ 폐 회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

유 기 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차 례>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1
1.3 연구의 범위	1
1.4 주요 연구 내용	2
1.5 연구의 절차	2
제2장 애완동물의 가치와 문제점	3
2.1 애완동물의 가치	3
2.2 애완동물의 사육실태	6
2.3 애완동물의 사회적 문제점	8
제3장 바람직한 애완동물 사육조건	15
3.1 적정사육 방법	15
3.2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건	17
제4장 애완동물의 관리 방안	23
4.1 관리방안 마련의 배경 및 관리대책 유형	23
4.2 사육자 및 판매업자의 역할	28
4.3 애완동물 관리를 위한 개별 제도 도입 방안	32
4.4 유기동물 관리방안	45
4.5 교육 및 홍보	51
4.6 애완동물의 관리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체계	53
■ 참고문헌	56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도시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대부분은 개나 고양이로, 개의 경우에는 광견병과 같은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며 고양이의 경우에는 소형동물을 공격하거나 쓰레기봉투를 훼손하기도 하고 도로에 뛰어드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유기동물의 대부분은 애완동물로 사육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어 이들 애완동물이 유기동물이 되기 이전에 판매 및 사육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현재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도 없고 판매, 사육, 사체처리에 이르는 일관된 관리체계가 없어 사육자와 행정기관 모두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유기동물을 관리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

1.2 연구의 목적

- 애완동물의 판매와 사육과정에서 판매업자 및 사육자가 동물보호, 공중위생,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하여 애완동물이 생명체로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동물보호 및 진료와 관련된 동물병원이나 보호단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애완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상함.
- 판매업자 및 사육자의 준수사항과 각급 정부 및 관련단체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정비 등 추진방법을 제시함.

1.3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에서 다룰 주요 애완동물 : 개와 고양이에 한정함.
- 애완동물의 보호와 관리 관계자 : 판매업자, 사육자, 각급정부, 동물병원, 동물

보호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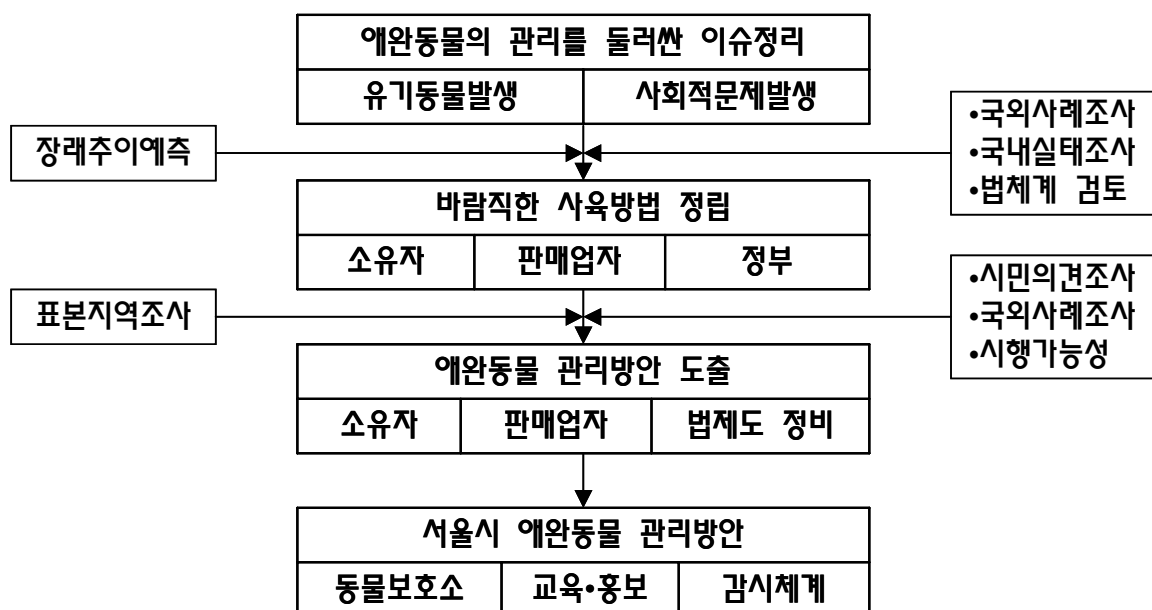
-관계자의 업무영역

- 판매업자 : 판매동물의 사육·관리, 판매시의 기본역할, 폐사동물 처리 등
- 사 육 자 : 사육관리, 예방접종, 외출요령, 폐사동물 처리 등
- 각급정부 : 필요사항의 제도화 및 집행, 유기동물관리, 관리체계 마련 등
- 관련단체 : 계몽홍보, 사육자의 역할 대행, 각급정부의 역할 대행 등

1.4 주요 연구 내용

- 서울시 애완동물 및 유기동물의 현황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해 향후 변화추이 예측
- 기존의 서울시 애완동물 및 유기동물의 관리실태 분석
- 애완동물로 인한 사회·환경적 문제 사례 분석
- 외국의 애완동물 및 유기동물의 관리체계 사례조사
- 국내에 적용 가능한 관리시책 및 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민의 애완동물에 대한 애착과 규제 등에 관한 의식조사

1.5 연구의 절차



제2장 애완동물의 가치와 문제점

2.1 애완동물의 가치

가. 용어로 살펴본 애완동물

○ 애완동물(愛玩動物, pet)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¹⁾. 일반적으로 몸집이 작고 귀여운 것, 빛깔·자태·우는 소리가 고운 것, 애교가 있는 것 등이나 넓은 뜻으로는 모든 동물이 애완동물이 될 수 있음²⁾.

○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동물 행동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의 8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한 자리에서 개·고양이·새 등의 애완동물을 종래의 가치성을 재인식하여 반려동물로 부르도록 제안하였고³⁾ 승마용 말도 여기에 포함하도록 함.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함.

○ 가정동물(家庭動物, household animal)

-가정동물에 대해 법적 정의된 경우는 2002년 일본 환경성 “가정동물등의사육 및보관에관한기준” 중 제2조에서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로서 가정 등에서 사육하거나 보관되는 동물 그리고 정서함양 및 생태관찰을 위해 사육하거나 보관되는 동물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음. 여기서 가정동물은 애완동물을 포함한 가정 및 학교·복지시설 등에서 사육하거나 보관되는 모든 동물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음⁴⁾.

1) 국어사전.

2) 두산대백과사전.

3) 두산대백과사전.

4) 가정동물등의사육및보관에관한기준 (2002년 5월 28일, 환경성 고시 37호)

제2 정의 이 기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기술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2) 가정동물 등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서 가정 등에서 사육하거나 보관되고 있는 동물, 그리고 정서함양 및 생태관찰을 위한 사육이나 보관되고 있는 동물을 말한다.

나. 역사 속의 애완동물

- 수렵사회 : 사냥용 길잡이나 집지키기용으로 야생동물을 길들임.
- 농경사회 : 노동력(소)을 확보하고 기동성(말)을 높이고 식량자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육함.
- 고대시대 :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사육했고, 중국, 그리스, 로마 등에서도 왕족이나 귀족들의 권위의 상징으로 애완동물이 이용됨.
- 중세유럽 : 나이 많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여인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길렀으며,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사육은 18세기말 중산층이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부터임.
- 우리나라 : 애완동물이라는 개념보다는 방범용 또는 곡식보호용으로 개나 고양이를 기름.

다. 애완동물과 건강증진과의 관계

○ 성인과 애완동물 사육

- 직접적인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보다 생존율이 높음.
- 애완동물을 기르는 노인이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노인보다 의사검진율이 낮고 심장박동도 안정적임.
-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기르지 않는 사람보다 운동량이 많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됨.
- 애완동물은 주인으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여 고독감과 우울증을 덜어줌. 이는 심장계통의 질병억제에 효과적임.
- 노년에 자식들과 떨어져 살면서 가족에 대한 애정을 애완동물을 통해 보완할 수 있게 됨.
-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끼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사회성이 확대되며, 독신가정이 증가하면서 그 가치가 확대됨.

○ 아동발달과 애완동물 사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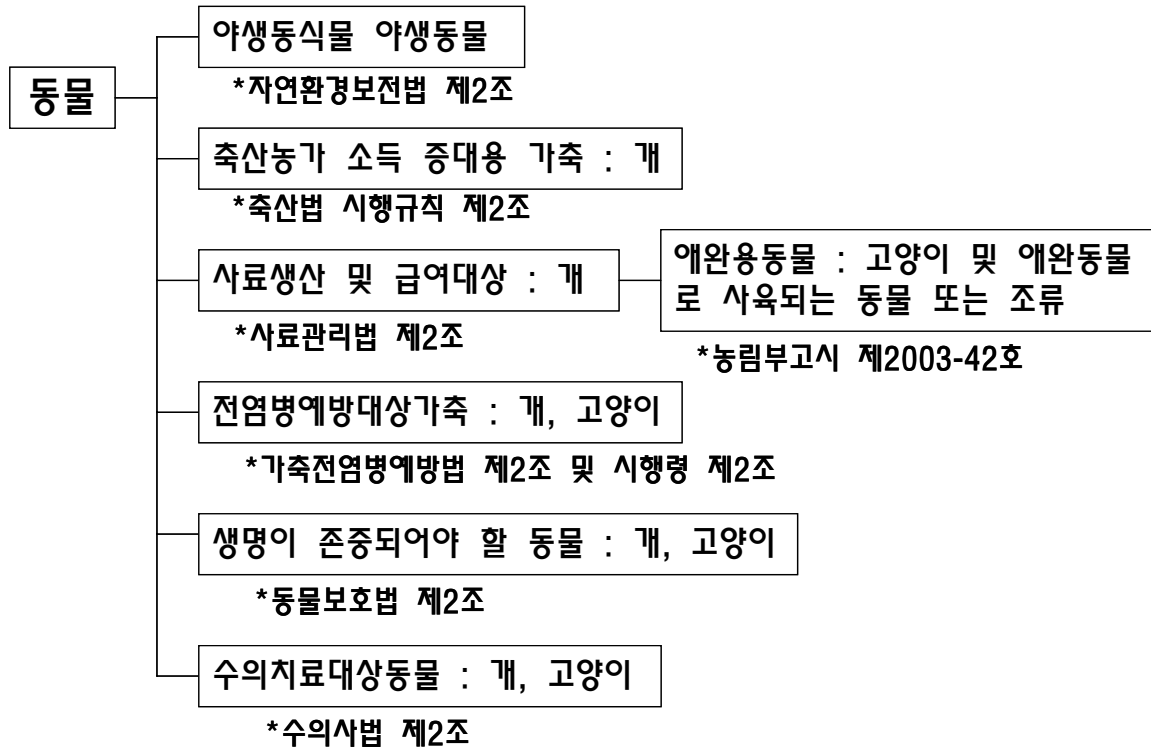
-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부모와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의 향상에 도움이 됨.

- 애완동물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대할 때 동정심과 이해심이 넓어짐.
- 애완동물이 비가역적이지만 일종의 말동무 즉, 칭찬, 격려, 지시, 처벌 등의 대상이 됨에 의해 의사소통능력을 이끌어내는 자극제 역할을 함.
- 부모와 조기이별, 부모의 직장생활 등에 의해 부족해진 부모와의 대화 및 심리적 접촉을 애완동물을 통해 일부 충족시킴.
- 애완동물의 짧은 수명과 질병 등에 의한 사망을 보면서 어른이 되어서 경험하게 될 인간관계에서의 이별과 사망 상황을 미리 경험하게 됨.

라. 타 동물과 애완동물과의 관계

-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인 용어일 뿐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며 분명한 점은 야생동물은 아니라는 점임⁵⁾.
- 애완동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곳은 사료관리법에 근거를 둔 농림부 고시이며, 이 경우에도 애완동물이라는 용어가 아닌 애완용 동물(고양이 및 애완용으로 사육되는 동물 또는 조류)이라 표현하고 있음.
- 결국 애완용으로 가장 많이 사육되는 개나 고양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용, 사료급여대상, 전염병예방대상 또는 수의치료대상에 해당되며,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생명이 존중되어야 할 대상임.
- 그 외에 애완용으로 사육되는 포유류, 파충류, 조류 등은 어떤 법에서도 보호 및 관리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 애완동물이란 사육자의 관점에 의해 좌우되는 지극히 주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애완동물의 천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 결국 애완동물은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 중 생태관찰이나 정서함양 등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소유자와 근접한 곳에서 길러지는 동물』로 보아야 할 것임.

5) 2002년 9월 농림부 동물보호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최초로 애완동물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상태임.



<그림 2.1> 우리나라의 동물관련법상 개와 고양이의 위치

2.2 애완동물의 사육실태⁶⁾

가. 사육되는 애완동물의 수

○ 애완동물 사육 가구수

-애완동물 사육가구수 : 조사표본의 17.2%

-개 사육 가구수 : 조사표본의 16.6%

-고양이 사육 가구수 : 조사표본의 0.8%

⇒ 애완동물 사육가구수 : 638,929가구(=3,714,697가구 x 17.2%)

⇒ 약 6가구당 1가구 꼴로 애완동물 사육

○ 애완동물 사육두수

-개의 평균 사육두수 : 1.3마리

-고양이의 평균 사육두수 : 1.0마리

6) 애완동물의 사육실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04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설문방식에 의해 조사되었다. 표본은 각 자치구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했으며 가구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만20세 이상의 서울거주시민이지만 모집단은 20세 이상의 모든 시민이 아니고 현재 310만 정도의 가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개 사육 두수 : 801,632마리($=3,714,697\text{가구} \times 16.6\% \times 1.3\text{마리}$)
- ⇒ 고양이 사육 두수 : 29,718마리($=3,714,697\text{가구} \times 0.8\% \times 1.0\text{마리}$)
- ⇒ 총사육두수 : 831,350마리⁷⁾
- ⇒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육되는 애완동물의 수를 23만마리(개 17만 마리, 고양이 6만 마리)로 추정하여 왔으나, 금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추정된 애완동물의 수는 서울시의 추정치보다 3.6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애완동물 잠재 사육두수

- 애완동물을 기를 계획을 가진 가구수 : 비사육가구의 5.1%(표본의 4.2%)
- 추가 사육가구수 : 156,017가구($=3,714,697\text{가구} \times 4.2\%$)
- 총사육가구수 : 794,946가구($=638,929\text{가구} + 156,017\text{가구}$)
- ⇒ 약 5가구당 1가구 꼴로 애완동물 사육⁸⁾
- 잠재적 사육두수 : 향후 개나 고양이를 기를 계획이 있는 가구수까지 고려하면 서울시에서 사육되는 개나 고양이는 1,022,460마리($=794,946 \times 95.4\% \times 1.3 + 794,946 \times 4.6\% \times 1$)에 이를 전망이다.

나.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가구의 특성

- 주택유형 : 오피스텔·상가 등 기타유형 거주자들의 30.4%가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다음으로 단독주택(22.4%), 아파트(12.7%) 순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의 애완동물 사육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소유형태 : 월세 거주자가 가장 많이 사육하고(20.7%), 다음으로 자가 소유자가 높음(19.1%).
- 연령 : 20대(20.4%)가 가장 높고 30대(12.2%)가 가장 낮음.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20대의 특성과 유아들의 보육이 많은 30대의 연령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기타
 - 직업 중에서는 사무직(21.9%)이 가장 높으나 학생의 경우도 20.2%가 애완동물을 사육함.
 - 가구소득에서 상위소득이 21.1%로 가장 높으나 소득을 밝히지 않는 계층의 사육율이

7) 미국 뉴욕시에는 280만마리, 일본 동경도에는 210만마리의 애완동물이 사육된다는 추정이 있음.

8) 미국은 3가구당 1가구가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으며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가구의 경우 가구당 사육두수는 개 1.6마리, 고양이 2.1마리임(AVMA, 2002)

22.%에 이르고 학력을 밝히지 않는 계층의 사육율이 33%로 가장 높음.

다. 애완동물의 사육형태

○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이유

- 가족이 좋아해서 기르는 경우(52.3%)가 가장 많으며, 본인이 좋아해서 기르는 경우도 24.4%에 이름. 선물 받는 경우(13.4%)도 대체로 높으며 집을 지키거나 곡식보호 등의 가축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4.7%에 불과함.
- 본인이 선호해서 기르는 경우는 20대(34.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집을 지키거나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기르는 경우는 50세 이상(8.7%)에서 가장 높음.
- 가족이 좋아해서 기르는 경우는 40대 69.%, 30대 53.3%로 이 연령에서 어린 자녀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됨.
- 주택의 소유형태별로는 자가나 전세의 경우 각각 53.2%, 59.3%가 가족들이 좋아해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며, 월세의 경우에는 66.7%가 본인이 좋아해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 사육비

- 월 4만 6천원의 사육비가 소요된다고 하며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많은 6만 2천원의 사육비를 지출함.

○ 예방접종 여부

- 92.4%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5.2%에 불과함.

○ 분실에 대비한 인식표 부착 여부

- 인식표를 부착한 경우는 21% 수준이고 79%는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음.

2.3 애완동물의 사회적 문제점

가. 유기동물 발생

○ 유기동물의 발생 실태

- 서울시(각 자치구)에서 포획된 유기동물의 수는 1999년 1,567두, 2000년 2,153두, 2001년 3,279두, 2002년 3,404두, 2003년 7,389두 등 매해 그 수가 증가하고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음.
- 추정 사육두수 대비 유기동물의 수는 2003년을 기준으로 $0.9\%(=7,389 / 831,350 \times 100)$ 임.⁹⁾
- 각 자치구들은 유기동물의 포획과 처리를 위해 동물보호소 또는 동물병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자치구마다 연간 1,200만원~4,500만원(모든 자치구의 지불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8억원)의 비용이 소요됨.
- 유기된 동물들은 각 자치구들의 재정적인 부담 이전에 포획되기까지 생활환경을 훼손하고 차도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전염병을 유발하거나 매개체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유기된 동물 중 특히 고양이는 소형동물(포유류, 조류)을 공격하여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많으며 실제로 조류 등의 번식기에 유기된 고양이들이 조류 등을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됨.

○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도 :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1,000인의 설문조사 응답자중 53%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비사육자의 56%, 사육자의 45%가 심각하다고 인식함으로서 사육자의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인식도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유기동물이 유발하는 피해유형 : 음식물이나 쓰레기봉투 훼손(31.6%), 배설물로 인한 냄새(21.7%), 소음피해(15.1%) 등의 순이며 5.4%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함.
- 실제로 2003년에 서울시에는 유기동물(개, 고양이)에 의한 공포감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서류접수 26건, 전자민원접수 158건 등 총 184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음.

9) 일본 동경도의 경우 2002년에 등록된 개의 0.5%가 사육포기 또는 유기동물로 동경도가 관리하였으며(동경도 동물보호상담센터, 2003), 미국의 뉴저지주의 경우 1997년에 사육된 개나 고양이의 2.5%가 동물보호소에서 관리되었다고 함(Elizabeth A.C and Andrew N.R, 2003).

나. 공동생활 위험

○ 심리적 불안

- “이웃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때문에 소음, 냄새, 공포감 등의 불안감을 느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애완동물을 1,000인의 설문조사 응답자중 52%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함.
- 애완동물 사육자의 피해경험은 21%로 전체적으로 사육자가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낮아 사육자와 비사육자간의 인식차이를 보이나 21%라는 사육자의 피해경험도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인명피해

- 2003년에 서울시에서는 총 5건의 민원이 개에 물려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접수됨.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동물관련 안전사고는 2001과 2002년의 경우 104건이었지만 2003년에는 5월까지 53건으로 증가했다고 함(YTN 2003.7.2. 보도자료).
- 2003년 12월 8일 울산시 동구 방어동 어린이집 마당에서 원생 여모군(6세)이 알래스카 맬러뮤트 종의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짐(동아일보 2002.12.9. 보도자료).
- 2003년 12월 8일 강원도 속초시 모초등학교 후문부근에서 끈 풀린 잡종개가 하교길의 어린이 3명을 덮쳐 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하여 포획함(스포츠서울 2003.12.8. 보도자료).
- 2003년 11월 2일 경북 안동시 서후면 김모 할머니가 기르던 5년생 풍산개에게 물려 숨짐(뉴시스 2003.11.3. 보도자료).
- 2003년 3월 19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식당앞 도로에서 학원의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군(9세)이 식당에서 기르던 진돗개에게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YTN 2003.3.20. 보도자료).
- 이러한 사고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미국인의 1% 이상이 교상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2000년에 일본 동경도에서는 510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515인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동경도동물보호상담센터, 2003).

○ 기타 생활불편사항

- 2003년 서울시 민원실태 : 99건의 쓰레기봉투 훼손(개 1건, 고양이 98건), 151건의 소음문제(개 83건), 19건의 개의 털날림 문제, 38건의 냄새문제(개 37건), 19건의 음식물 훼손문제(고양이 18건), 38건의 배설물 피해문제(개 34건) 등 개나 고양이에 의한 민원이 364건이 제기됨.
- 2002년 동경도 : 악취 5,211건, 소음 1,789건, 부상 1,027건 등 공동생활을 위협하는 민원이 8,027건이 제기됨.

다. 공중보건 및 환경 위협

○ 개의 광견병

- 개에 관한 전염병으로는 파보바이러스, 렙토스피라증,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 바이러스, 심장사상충, 광견병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병은 광견병임.
- 광견병은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포유류에 기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광견병이 걸린 개를 비롯하여 오소리, 너구리 등이 다른 개나 사람, 소 등을 물었을 때 전염되며, 뇌에 전파될 경우 치사율이 100%라고 함.
- 일본에서는 1957년 이후 광견병의 발생이 없으나 우리나라에는 너구리와 같은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여전히 광견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의 발달 등에 의해 빠른 확산이 우려됨.

○ 개의 개회충증

- 개회충(*Toxocara canis*)과 개소회충(*Toxocaris leonina*)의 2가지가 있으며 성충은 개의 소장에 기생하고 유충은 간장, 폐장 및 기타 장기나 조직으로 옮겨 해당부위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함.
- 개회충의 문제점이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은 2003년 11월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4월부터 7개월간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어린이놀이터 555곳의 모래 검사에서 2.9%인 16곳에서 개회충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면서 부터임.
- 여기에 개회충은 개의 배설물을 통해 사람에게 이전 될 수 있으며, KBS 환경스페셜(질병의 사각지대-애완동물의 경고)에서 개회충에 감염된 어린이가 시력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킴¹⁰⁾.

10)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러한 개회충의 발견이 유기동물 등 주인 없이 떠도는 동물들에게 의해 유발되며 소유자가 사육중인 동물은 대부분은 동물병원에서 구충을 실시한다고 함.

○ 지하수 등의 오염 가능성

-현재 애완동물과 같이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의 사체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처리는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기른 동물을 쓰레기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적당한 장소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알려져 있음.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완동물 사체의 매장이 허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할 경우에도 토지이용, 생활환경보전, 공중보건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매장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매장장소와 매장방법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임.¹¹⁾

-그렇지만 동물사체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매장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설묘지에 매장 가능)만 시도지사가 지정한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개인이나 판매업체에서 발생한 것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적당한 장소에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주변의 지하수나 수계의 오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¹²⁾.

11) 매장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①법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제6조 (매장 등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장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1조관련)

1. 개인묘지 : 나.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진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면적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동물학대

○ 동물의 유기

-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는 사육주가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운동을 시키지 않거나 애완동물만 혼자 방치하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있으나 동물사육이 옥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기는 어려움.
- 이에 서울시에서 포획된 유기동물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개나 고양이 등 유기동물이 부적절하게 보호되거나 경우에 따라 버려지는 현상을 확인하고자 함.
-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2003년의 경우 애완동물 중 0.9%가 유기되었고, 포획한 7,389마리의 개와 고양이중 분실신고가 된 경우는 9.2%에 불과하다는 점은 그 자체가 애완동물 학대라 할 수 있음.
- 포획된 개의 81%가 사육된 흔적이 있고, 98%는 친화적이며, 63%가 순종혈통이고, 85%가 외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의도적으로 유기되었다는 것을 시사함.

<표 2.1> 유기견의 연령 및 혈통, 성격, 세부건강상태

구분		연령	혈통		성격		활동성		체표상태**		외상	
성별	개체수	개월	순종	잡종	공격적	친화적	활발 하다	활발하지 못하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합계	1074 (100)		671 (62.5)	403 (37.5)	22 (2.0)	1052 (98.0)	891 (83.0)	183 (17.0)	872 (81.2)	202 (18.8)	163 (15.2)	911 (84.8)
암컷 (%)	401 (100)	24.5	219 (54.6)	182 (45.4)	6 (1.5)	395 (98.5)	328 (81.8)	73 (18.2)	320 (80.0)	81 (20.0)	59 (14.7)	342 (85.3)
수컷 (%)	673 (100)	21.6	452 (67.2)	221 (32.8)	16 (2.4)	657 (97.6)	563 (83.7)	110 (16.3)	552 (82.0)	121 (18.0)	104 (15.5)	569 (84.5)

* 출처 : 2004년 1월~4월 현재까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유기된 동물 중 보호동물DB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http://www.karama.or.kr/list_miss.asp)

** 체표상태 : 목걸이, 미용상태 등 관리되어진 흔적이 있는지의 여부

- 포획된 고양이의 경우도 84%가 사육된 흔적이 있고 98%가 외상이 없으며, 84%가 활동성이 좋다는 것은 동물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기 보다 동물을 제대로

12) 2003년에 서울에서 사육되는 개는 801,632마리이며, 이들의 수명을 평균 10년, 개체당 무게를 4kg(포획된 유기견의 평균 무게)으로 가정하면 서울에서 1년에 발생하는 애완견의 사체는 연간 320톤(=801,632마리 x 4kg ÷ 10년)으로 추정됨.

- 로 돌보지 않거나 돌보기 어려워 유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보여줌.
- 이러한 유기동물의 특성은 유기동물의 신체적 특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동물에 대한 일종의 학대근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봄.

<표 2.2> 유기고양이의 연령 및 혈통, 성격, 세부건강상태

구분		연령	혈통		성격		활동성		체표상태**		외상	
성별	개체수	개월	순종	잡종	공격적	친화적	활발하다	활발하지 못하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합계	308 (100)		4 (1.3)	204 (98.7)	247 (80.2)	61 (19.8)	258 (83.8)	50 (16.2)	258 (83.8)	50 (16.2)	5 (1.6)	303 (98.4)
암컷 (%)	123 (100)	10.4	3 (2.4)	120 (97.6)	104 (84.6)	19 (15.4)	109 (88.6)	14 (11.4)	109 (88.6)	14 (11.4)	4 (3.3)	119 (96.7)
수컷 (%)	185 (100)	7.0	1 (0.5)	184 (99.5)	143 (77.3)	42 (22.7)	149 (80.5)	36 (19.5)	149 (80.5)	36 (19.5)	1 (0.5)	184 (99.5)

* 출처 : 2004년 1월~4월 현재까지 한국동물관리협회 유기된 동물 중 보호동물DB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http://www.karama.or.kr/list_miss.asp)

** 체표상태 : 목걸이, 미용상태 등 관리되어진 흔적이 있는지의 여부

○ 허약한 동물의 판매와 폐사

- 강아지의 경우 생후 50~90일까지 파보바이러스, 홍역바이러스, 광견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함.
- 그러나 90일 이전에 판매되면서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판매되면 소비자가 사육하는 동안에 사망할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나 소비자들이 어린 강아지를 원하고 타 경쟁업체와 저가로 경쟁하기 위해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않은 채,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강아지의 폐사율이 높으며, 한때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판매된 강아지의 10마리 중 4마리가 폐사했다는 보고도 있었음.
- 그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애완견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하여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상거래상의 구제 조치에 불과할 뿐 폐사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제3장 바람직한 애완동물 사육조건

3.1 적정사육 방법

가. 동물보호 측면의 적정사육 방법

○ 애완동물에 대한 기본인식

- 애완동물은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함.
- 애완동물은 반려동물로서 건강하게 사육되어야 함.
- 애완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종생사육을 목표로 해야 함.

○ 번식 · 판매단계의 보호방법

- 건강한 어미와 새끼를 번식시킴.
- 항체가 형성된 이후에 판매함.
- 구매자에게 동물의 특성, 사육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예방접종 및 건강상태에 관한 증명서류를 인계함.

○ 사육단계의 보호 방법

- 종생사육을 염두에 두고 사육을 신중하게 결정함.
- 적절하게 먹이를 주고 운동을 시킴.
- 주기적으로 검진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함.
- 충분한 사육공간을 확보함.
- 청결하게 체표를 유지함.
- 탈주나 분실을 방지함.
-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를 유지함.
- 사육이 어려울 때는 양수자를 찾거나 안락사시킴.

○ 처리단계의 보호 방법

- 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고통이 적은 방법에 의존함.
- 사체는 적법하게 처리함.

나. 사회 속의 소구성원으로 위상 확보 방법

○ 사육자에 대한 기본인식

- 애완동물은 반려동물로서 사육자의 사육 결정은 존중되어야 함.
- 사육자는 애완동물이 사회의 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함.
- 사육자는 애완동물과 관련된 법규정을 준수해야함.

○ 이웃을 배려한 사육방법

-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공동이용공간의 배설물을 신속하게 처리함.
- 애완동물이 홀로 다니지 않게 함.
- 이웃의 왕래가 많은 시간에는 승강기 등의 사용을 자제함.
- 적정수의 애완동물을 기름.

○ 공공질서를 지키는 사육방법

- 목줄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외출함.
- 털갈이 시기에는 외출이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자제함.
- 집회장소, 동물원 등 동물이 흥분할 수 있는 곳은 데려가지 않음.
- 동물출입금지구역을 철저히 준수함.
- 기타 동물사육과 관련된 법규정을 준수함.

○ 공중보건 · 환경을 배려하는 사육방법

-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함.
- 위생관련시설에는 출입하지 않음.
- 배설물을 회수함.
- 야생으로의 탈주를 방지함.
- 애완동물의 사체는 적법하게 처리함.

3.2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건

가. 유기동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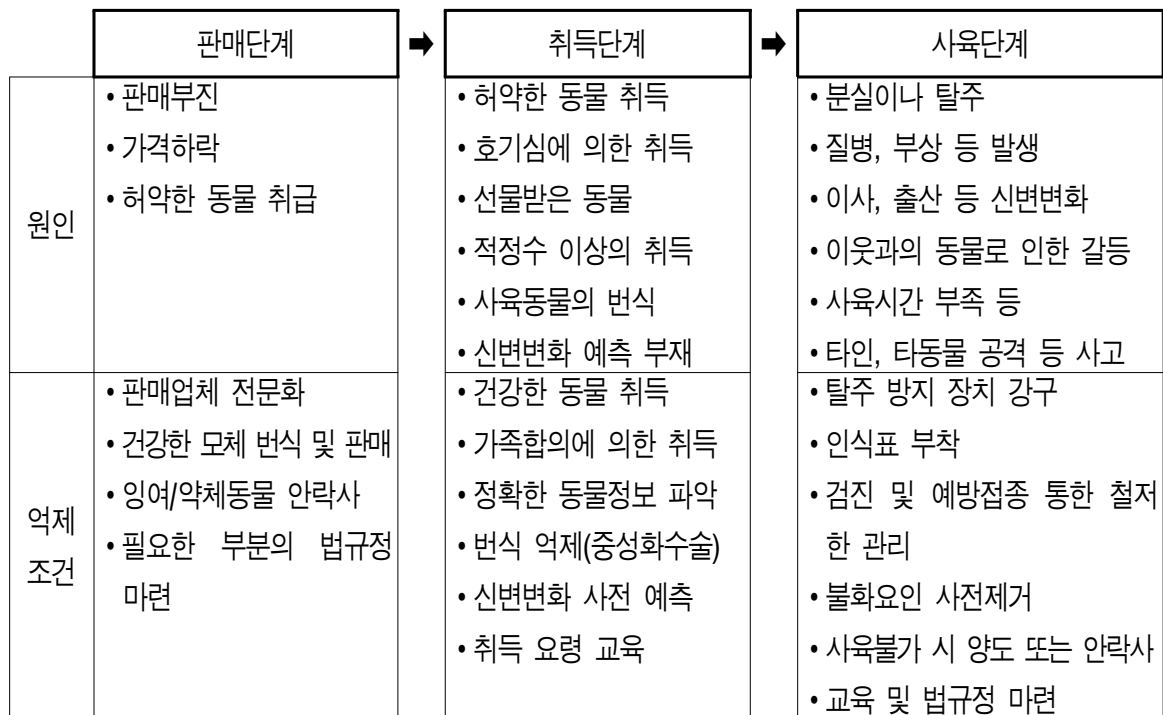
○ 유기동물로 인한 문제점

- 음식물이나 쓰레기봉투를 훼손함.
- 배설물을 함부로 배설함.
- 질병 또는 전염병 감염 및 전염의 가능성이 높음.
- 소음피해 또는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
- 소형 야생동물을 공격함.
- 포획과 처리에 공공의 비용이 소요됨.

○ 문제의 발생원인과 억제조건

- 판매단계 : 판매부진, 가격하락, 허약한 동물의 취급 등에 의해 유기동물이 발생하며, 이를 억제하려면 전문화된 업체의 성장, 건강한 모체와 예방접종 등에 의한 건강한 동물 판매, 약체동물의 안락사 및 법적 처리 등의 노력이 요구됨. 자발적 노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여 일부분을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취득단계 : 약체의 동물을 취득했거나 자신과 가족의 사육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채, 호기심 또는 자녀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취득했거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물을 받았거나 기존 사육동물이 번식하여 새끼동물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이사, 출산 등 신변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에 의해 동물사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건강한 동물 취득, 가족 모두의 합의를 통한 사육결정, 번식억제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판매업자는 해당동물의 습성이나 사육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도 교육체계를 마련해서 애완동물의 사육결정 및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육단계 : 분실이나 탈주 등 사육자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질병이나 부상 발생, 이웃과의 갈등, 사육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변변화, 타인의 공격 등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을 감당하기 어려워 유기하게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탈주동물을 찾을 수 있는 인식표 부착, 예방접종 및 정기적 검진, 이웃과

의 갈등요인을 줄이는 조치 강구 등이 필요하며 사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면 유기하지 말고 이웃, 친지 등에서 인수자를 찾거나 동물보호단체 등에 인수를 부탁해야 함. 그리고 정부는 이상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도화를 통해 모든 사육자들이 준수할 수 있게 하고 사육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 유기동물의 발생원인과 억제조건

나. 공동생활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

○ 공동생활에서의 애완동물의 문제점

- 생활의 불편과 이웃간 분쟁 발생
- 민원 처리와 유기동물의 포획에 따른 공공비용 소요
- 동물의 부적절한 관리로 직접적인 인명피해 발생

○ 피해의 발생원인과 억제조건

- 생활 불편 : 소음, 털 날림, 냄새,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훼손, 배설물 등에 의

해 생활불편이 발생하며 일부는 유기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함. 따라서 밀집된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에서는 애완동물의 사육을 자제하며 사육을 할 경우 동물청결, 성대수술 등 소음억제책 등의 사육자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함. 동시에 정부는 소유자가 없는 유기동물의 포획체계를 구축하며 억제조건 중 공익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육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추진함.

-인명 피해 : 주로 공격적인 동물, 체구가 큰 동물(이하 위험개이라 함)에 의해 사람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며 공격의 피해대상은 어린이와 노약자임. 위험개의 사람에 대한 공격은 탈주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통제 상태에서 어린이나 노약자가 접근했을 경우에 발생함. 따라서 위험개에 대해서는 평소에 탈주방지장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사육이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함. 동시에 위험개를 사육하는 곳에서 위험개사육표지도 부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위험개에 대한 사육실태를 제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탈주한 위험개 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사살할 수도 있도록 포획 및 보관절차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음.

	생활불편	인명상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발생에 의한 이웃 피해 • 털 날림 • 쓰레기봉투 훼손 • 음식물 훼손 • 냄새 발생 • 배설물 방치 • 유기동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개의 사육 • 위험개 탈주 • 어린이 및 노약자의 위험개 접근
억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수 사육 • 성대 수술 등 소음억제책 강구 • 공동주택에서의 사육 자제 • 동물의 청결 관리 및 털깎기 철저 • 배설물 회수용기 휴대 • 유기동물의 발생억제 및 포획처리 • 필요 부분의 강제이행을 위한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개 탈주방지 장치 강구 • 외출 시 안전장구 구비 철저 • 위험개사육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 • 어린이 시설의 위험개사육 금지 • 위험개 사육 등록제 도입 • 탈주위험개의 포획처리 단순화

<그림 3.2> 애완동물로 인한 생활불편의 원인과 억제 조건

다.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

○ 공중보건 등에 관한 애완동물의 문제점

-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광견병 발생
- 식품업소 등 위생이 요구되는 곳에서의 동물출입은 질병 확산에 용이
- 동물사체 등의 부적절한 처리는 지하수 등 환경자원 오염 초래
- 방출된 애완동물(특히 고양이)은 소형야생동물 공격

○ 피해의 발생원인과 억제조건

- 공중보건 : 광견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공공장소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위생이 요구되는 장소에 출입하는 등 사육자의 개인적 행동과 공공장소에서 유기동물을 방치 등의 요인에 의해 공중보건의 위협받게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완동물의 예방접종과 질병치료, 배설물의 회수, 위생업소 출입자제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유기동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분은 제도화하며 그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사육자에게 제공해야 함.
- 환경피해 : 소형 야생동물 공격, 쓰레기봉투 훼손 등의 피해는 주로 유기동물에 의해 발생하며, 동물사체의 부적절한 처리는 지하수와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음. 특히 동물사체의 매몰은 그 장소가 생활주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유기동물은 구조 또는 포획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유기동물의 사체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과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육자들이 그 가치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함.

	공중보건 위협	환경피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회피 • 공공장소에 배설물 방치 • 질병 방치 • 위생이 요구되는 장소에 출입 • 유기동물 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야생동물 공격 • 쓰레기봉투 등 훼손 • 동물사체의 부적절한 처리 • 유기동물 방치
억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예방 접종 • 정기적인 검진 및 질병치료 • 배설물 회수용기 휴대 • 위생요구업소에 출입 자제 • 유기동물의 포획 및 처리체계 구축 • 사육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필요한 부분의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동물 포획 처리체계 구축 • 적법한 사체처리 • 다양한 사체처리체계 마련 • 사육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그림 3.3> 애완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 등의 원인과 억제조건

라.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

○ 동물학대의 문제점

-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엄성 상실
- 쉬운 사육포기로 유기동물 발생 등 사회적 비용 초래
- 부적절한 애완동물 관리로 공동생활방해, 공중보건 등 사회문제 유발

○ 피해의 발생원인과 억제조건

- 취득단계 : 계획적이지 못한 취득, 원하지 않는 종의 취득 등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 이루어지며, 어떤 경우이든 가족의 합의, 원하는 종의 선택이 필요하며, 호기심에 의한 번식 등은 억제되어야 함.
- 사육단계 : 사육시간 부족, 경제적 부족, 사육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신변변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양수자를 찾거나 양수자가 없을 경우 안락사를 시켜야 함. 정부에서는 양도가 용이한 체계를 구축해주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때 유기하지 않도록 등록제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취득단계	사육단계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기심에 의한 취득 • 선물받은 동물 • 적정수 이상의 취득 • 사육동물의 번식 • 신변변화 예측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시간 부족 • 경제력 부족 • 동물사육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 이사, 출산, 전업 등 신변변화
억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종의 취득 • 가족합의에 의한 취득 • 번식 억제(중성화수술) • 신변변화 사전 예측 • 유기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육자 등록제 등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불가 시 양도 또는 안락사 • 양도경로의 다양화 •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육자 등록제 등의 도입

<그림 3.4> 동물학대의 원인과 억제조건

제4장 애완동물의 관리 방안

4.1 관리방안 마련의 배경 및 관리대책 유형

가. 애완동물사육의 잠재력

○ 설문조사의 결과

- 2003년 현재 서울시에서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는 가구는 638,929가구, 개나 고양이의 수는 831,350마리로 추정됨(2장 참조).
- 현재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지 않은 가구 중 향후 사육예정자를 포함하면 개나 고양이의 사육가구는 794,946가구, 동물수로는 1,022,460마리로 추정됨(2장 참조).
- 결국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수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사회의 구조

- 미국의 경우 정상인의 가정에서는 독신자, 독자 가정, 노부부 가정, 어렸을 때 동물을 길러본 장년 가정 등에서 주로 애완동물을 기르며, 이외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길인도와 치료목적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우가 많고, 어느 경우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함(Johnson, et. al., 1992 ; AVMA, 2002).
-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서울의 인구구조의 변화추세에 투영해보면 <표 4.1>과 같이 가구당 인구가 감소하고, 독신자 가구가 증가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 애완동물의 사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잠재력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음.
- 더 나아가 미국과 같이 36.1%의 가구가 개를 사육하고, 사육가구당 1.6마리의 개를 사육(AVMA, 2002)하는 시대가 온다면 당장 서울에서는 215만마리(=3,714,697가구 x 36.1% x 1.6마리)에 이르는 개를 사육할 수도 있음¹³⁾.

13) 미국은 자녀들과 분리되어 거주하고 단독주택 중심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동물의 사육이 많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미국의 사육실태를 서울에 투영할 때의 결과는 과대평가일 가능성이 높으며, 애완동물의 천국이라는 미국의 실태를 통하여 서울의 최대 사육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을 뿐임.

<표 4.1> 애완동물의 사육과 관련된 서울의 인구지표 변화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가구당 인구수	4.6	4.1	3.8	3.4	3.2
독신자 가구수	82,477	156,207	257,382	382,024	502,245
65세이상 노령인구수	207,955	279,956	362,603	431,100	535,053
외국인 거주자수	13,747	13,355	9,327	14,040	61,920

출처 : 통계청(1980, 1985, 1990, 1995, 2000)

나. 외국의 관련 제도 추이

○ 일본

-1950년 광견병을 억제하기 위해 광견병예방법을 제정하면서 특히, 개를 중심으로 한 등록제가 실시되었고 이후 포괄적으로 동물을 다루는 동물보호법(1973년), 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법률(1999년) 및 가정동물등의사육및보관에 관한기준(2002년)이 마련되었음.

○ 영국

-1930년에 개관리명령이 만들어졌고, 2000년에 종합적인 동물보호법이 제정됨. 그 기간에 애완동물법(1951년), 개허가법(1959년), 유기금지법(1960년), 위험개 관리법(1991), 개배설물수거법(1996) 등이 추가 제정됨.

○ 독일

-1933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최근 들어 위험개보유법(2001) 등이 제정됨.

○ 미국

-1985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각 주별로 동물 및 애완동물에 관한 관리규정이 마련됨.

○ 호주

-각 주별로 동물보호법(캔버라, 1992 ; 시드니 및 퀸즈랜드, 2001 ; 브리스번, 2003)이 제정되었으며, 별도로 반려동물법(시드니, 1996년), 가내동물법(캔버라, 2002)이 제정됨.

○ 뉴질랜드

-1996년에 개관리법이 제정됨.

○ 우리나라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됨.

○ 법 제정의 흐름

-각 국가들이 종합적인 동물보호측면에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애완 동물이나 가정용동물에 대한 개별법령의 제정 여부와 시기는 각 국가마다 다름. 예를 들어 일본은 광견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광견병예방법이 먼저 제정되고 이후에 동물보호법 등이 제정됨. 영국,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등도 일본과 유사하게 개체별로 법을 제정하고 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함. 독일은 동물보호법을 먼저 제정하고 추후에 위험개보유법 등을 추가로 제정함. 미국과 호주 캔버라 등에서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관련법이 정비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미국, 호주 캔버라 등과 동일하게 먼저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애완동물이나 개에 관한 별도의 법이 제정되거나 기존의 동물보호법이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2> 각국의 동물보호 관련법 및 제정 시기

구분	동물관련 법률 및 규정
193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 개관리명령('30) ◦ 독일 : 동물보호법('33)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 광견병예방법('50) ◦ 영국 : 애완동물법('51), 개허가법('59)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 동물유기금지법('60), 동물안락사금지법('64)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 동물보호법('73)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동물보호법('85)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애완동물보호법('90) ◦ 우리나라 : 동물보호법('91) ◦ 영국 : 위험개관리법('91), 개배설물수거법('96) ◦ 호주 캔버라 : 동물보호법('92), 시드니 : 반려동물법('96) ◦ 뉴질랜드 : 개관리법('96) ◦ 일본 : 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법률('99)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 동물보호법(2000) ◦ 독일 : 동물보호명령('01), 위험개보유법('01) ◦ 호주 시드니 및 퀸즈랜드 : 동물보호법('01), 캔버라 : 가내동물법('02), 브리스번 : 동물법('03) ◦ 우리나라 : 동물보호법 개정공고('92.9., 농림부공고 제2002-101호) ◦ 일본 : 가정동물등의사육및보관에관한기준('02)

출처 : 김수진, 2003, "애완견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pp.30~40. 요약재정리.

다. 관리대책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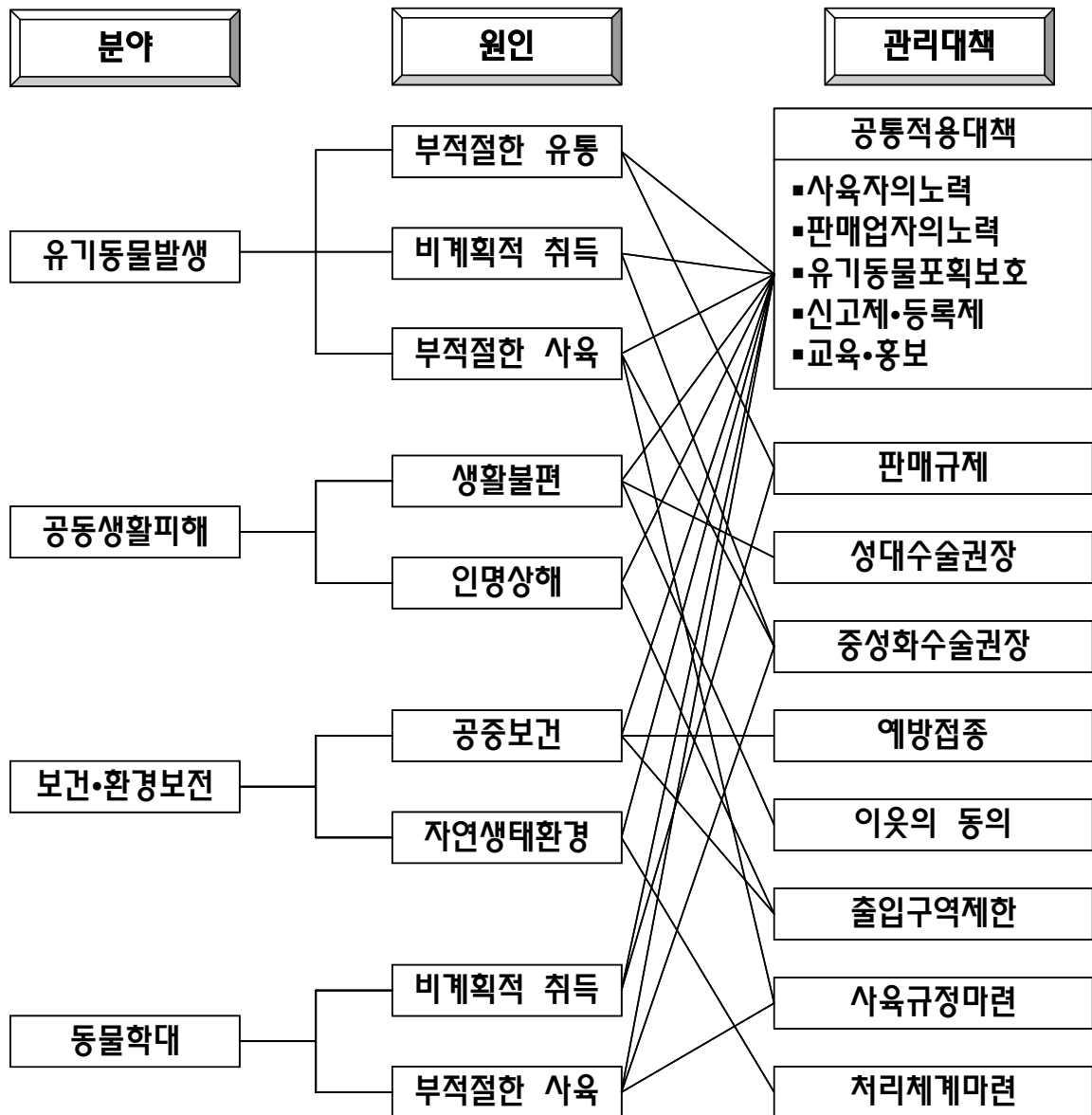
○ 공통적용 대책

- ①유기동물 발생, 공동생활 피해, 보건 및 환경 보전, 동물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육자나 동물판매업자가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책무를 다함. ②또한 유기동물은 이상의 모든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 그러나 사육자나 동물판매업자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렵고 유기동물도 꾸준히 발생하거나 오히려 증가한다면 사육자 및 판매업자로 하여금 보다 명확하게 자신들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애완동물의 사육과 판매를 정부로부터 통제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③신고제나 등록제 등의 도입이

필요함. 신고제나 등록제에서는 동물의 판매, 취득, 사육,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는 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애완동물의 사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갖게 됨. 한편 어떤 문제이든 사육자와 판매업자가 자신들의 책무와 법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④홍보와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개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 판매단계 규제 : 판매업체의 난립과 부실한 동물관리체계는 유기동물을 발생시키고 질병이 있는 동물을 판매하며 부적절한 사체처리를 유발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판매업체의 등록과 동물관리 및 판매방법을 법규를 통해 규정할 수 있음. 동일한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번식시킨 어린 동물의 개인적인 판매나 양도 등도 막을 수도 있음.
- 성대수술 권장 :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과 이에 따른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성대수술이 활용되기도 함.
- 중성화수술 권장 : 원하는 않은 번식과 이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그리고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을 활용할 수 있음.
- 예방접종 실시 : 애완동물로 인한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과 그 증명서의 휴대를 의무화할 수 있음.
- 이웃의 동의 : 애완동물의 사육에 따른 이웃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육에 대해 이웃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출입구역 제한 : 음식점, 시장, 백화점 등 식재료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곳에 애완동물의 출입을 규제함.
- 사육규정 마련 : 판매업자 및 개인 사육자의 애완동물 취급 방법을 법규에 명시하여 애완동물을 적절하게 사육하도록 함.
- 처리체계 마련 : 애완동물의 사체를 적절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 처리업 등을 갖추.



<그림 4.1> 애완동물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관리대책의 유형

4.2 사육자 및 판매업자의 역할

가. 사육자의 책무

○ 공통책무

-사육 결정 단계

- 애완동물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경제적 능력, 주거환경, 가족구성원의 변화, 이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육을 결정함.
- 사육하고자 하는 동물의 생태, 습성, 생리 등에 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고 가족 모두가 동의하는 동물을 선택함.

-사육단계

- 소유의 명시 : 책임 소재를 밝히고 탈주 또는 분실동물의 회수 등이 용이하도록 명찰을 부착함.
 - 건강 및 안전의 유지 : ①애완동물의 종류, 발육상황에 따라 적절한 먹이와 물을 공급함. ②질병 및 상처 예방 등 애완동물의 건강관리에 힘쓰며 질병 등에 걸렸을 경우 신속하게 수의사의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 ③애완동물의 종류, 습성, 생리를 고려한 사육시설을 마련하고 통풍, 온습도 유지, 위생을 배려함.
 - 생활환경 보전 : ①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나 타인의 토지, 건물 등이 손괴 또는 배설물이나 털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함. ②사육자는 애완동물의 배설물이나 털 등을 적절하게 처리함. ③공동주택의 거주자는 통로식의 경우 해당 통로, 복도식의 경우 해당 복도 거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애완동물의 사육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함¹⁴⁾. ④단독주택의 거주자는 애완동물의 사육으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함.
 - 번식제한 : 종생사육이 가능하거나 자신의 책임하에 양도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성화 수술, 암수 분리사육 등을 통해 번식을 제한함.
 - 수송 : 피로와 고통이 적도록 휴식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용기를 사용하여 안전 확보 및 탈주를 방지하며, 급식 및 급수에 유의함.
 - 감염성 질병의 예방 : 판매업자 및 수의사 등을 통해 감염성 질병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예방접종 등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 자신, 타인 또는 타동물의 감염에 유의함.
 - 탈주방지 : 탈주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장치를 설치하고 탈주시에서는 자신의 책임하에 신속하게 포획함.
 - 위해방지 : 위험개일 경우에는 타인의 접근을 막고, 포획기자재를 상비하며, 포획이 불가능할 때는 관계기관과 인근 주민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처분단계 : 사육환경, 신변변화 등의 이유에 의해 사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양수자를 찾아 양도하고, 양수자를 찾을 수 없거나 수명을 다한 경우에는 수의사와 협의하여 안락사 등을 강구하고, 안락사 등에 의한 사체 또는 자연사한 사체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처분함.

14) 서울시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제1항 제3호에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통로 또는 동일복도 거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 가축을 사육하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됨.

○ 개의 사육기준

- 원칙적으로 개를 풀어서 사육하면 아니되며, 목줄을 단 경우에도 개의 행동범위가 도로 또는 공공통로에 접해서는 아니됨.
- 사육주는 타인이나 타동물을 공격하거나 재산에 위해를 주지 않고 사육주가 통제할 수 있도록 개를 훈련시킴.
- 도로, 공원 등 옥외에서 개를 운동시킬 경우에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목줄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면서 운동시킴.
- 번식시킨 강아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이유기를 지나서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습성, 사육방법, 예방접종 기록 및 접종 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고양이의 사육기준

- 고양이의 사육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함.
- 질병의 감염방지, 불의의 사고방지를 위해 옥내사육을 원칙으로 함.
- 통제가 어렵고 야생 생존력이 강한 것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중성화수술 등 번식제한의 조치를 강구함.
- 번식시킨 어린 고양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이유기를 지나서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습성, 사육방법, 예방접종 기록 및 접종 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사육자 책무의 제도화 방안

- 동물보호법에 “애완동물편”을 만들어 사육기준을 삽입하거나 시행령에 담거나 동물보호법 관련 농림부고시로 「애완동물등가정동물사육기준」을 마련하거나 『애완동물사육및관리법』을 신규로 제정하여 책무를 규정함.

-사례

- 우리나라 : 동물보호법 제5조(적정한 관리 및 사육), 제6조(동물학대등의 금지)에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음¹⁵⁾.

15) 제5조(적정한 사육 관리) ①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학대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

- 일본 : 『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정동물등의사육및보관에관한기준」
(환경성고시 37호, 2002년 5월 28일)
- 기타 : 영국 『애완동물법』, 미국 『애완동물보호법』, 호주 시드니 『반려동물법』,
호주 캔버라 『가내동물법』 등이 있음.

나. 판매업자의 책무

○ 판매업자의 책무

-판매동물의 관리

- 동물의 종류와 발육단계에 따라 급식과 급수를 실시할 것
- 동물의 질병예방에 노력하고 어린 동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
- 번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암수를 분리하여 관리할 것
- 다수의 동물을 취급할 때는 과도한 다툼으로 부상을 입지 않도록 배려할 것
-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 부상이 발견되면 수의치료를 받을 것
- 동물의 취급과 위생관리 요령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종업원 전원에게 주지시킬 것
- 새로 도입된 동물의 건강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할 것

-동물의 판매

- 구입자에게 해당동물의 습성, 생리, 사육시 배려사항 등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자료형태로 전달할 것
- 동물을 판매할 때는 질병예방접종을 시킨 후 판매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해서 인도할 것
- 동물이 사회성을 획득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형성될 시기에 판매하며 이를 위해 개는 생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판매하도록 노력할 것
- 구입자에게 중성화수술 등 번식제한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사육장소가 공동주택일 때는 성대수술 등도 권장할 것

-환경유지

- 소음, 악취, 털 등에 의해 주변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
- 배설물, 오물, 사료찌꺼기 등을 적절하게 처리할 것
- 동물의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
-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오물이나 오수를 밖으로 유출시키지 말 것

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파리, 모기, 쥐 등의 서식을 방지할 것

-탈주 방지

- 사육시설을 견고히 설치해서 탈주를 방지할 것
- 탈주동물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포획하고 불가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이웃에 알릴 것
- 탈주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것

-시설 구조

- 시설은 동물의 행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넓이일 것
- 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동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구조일 것
- 동물의 수와 종류에 맞는 급식 및 급수시설을 갖추는 것
- 온도계를 설치할 것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을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둘 것

○ 판매업자 책무의 제도화 방안

-동물보호법에 “애완동물편”을 만들어 책무를 삽입하거나 시행령에 담거나 『애완동물사육및관리법』을 신규로 제정하여 책무를 규정함.

-사례

- 우리나라 : 동물보호법에 판매업자의 책무부분은 없음. 단 2002년 9월에 공고된 개정안 제5조의1(애완동물판매업)에 신고의무, 시설기준, 질병예방접종,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며, 개정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음.
- 일본 : 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동물취급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세규정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경도는 동경도동물애호및관리에관한조례(동경도조례제81호, 1979년 10월 27일)에 동물취급업자의 책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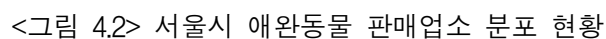
4.3 애완동물 관리를 위한 개별 제도 도입 방안

가. 애완동물 판매업자의 등록제

○ 서울의 애완동물 판매업자 현황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판매업소는 정부의 별도관리대상이 아닌 자유업으로

- 이에 서울시의 비공식 내부자료와 전화번호부(www.lets114.co.kr)를 이용하여 판매업소의 수를 조사한 결과, 2004년 5월 4일 현재 서울에는 302개소의 애완동물 판매업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중구에 48개소가 밀집되어 있고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에는 20개소 이상의 업소가 있으며, 서대문구에는 1개소만의 판매업소가 위치함.



- 보관중인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환경위생을 도모함.
- 허약한 동물의 판매를 방지하고 동물사체의 적절한 처리를 유도함.
- 전문적인 업체를 육성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임.
- 판매업소의 책무이행을 독려할 수 있음.

○ 외국의 사례

- 일본 : 판매, 보관, 대출, 전시, 훈련 등 동물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변경시와 승계시도에도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내용은 ①사람 또는 명칭, 주소,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사육시설을 설치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주요 취급동물의 종류 및 수, ④사육시설의 구조 및 규모, ⑤사육시설의 관리방법, ⑥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임. 등록증은 업소에 게시되어야 함.
- 미국 : 판매업소 등에 대해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판매업소 등에서 사육하거나 보관중인 모든 동물은 개체별로 등록이 필요함.¹⁶⁾

○ 판매업자 등록제에 관한 서울시민의 의견

- 1,000가구의 표본중 79%가 판매업자 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사육여부에 따라서는 사육자의 73%, 비사육자의 80%가 필요하다고 함.

<표 4.3> 판매업자 등록제에 관한 서울시민의 의견

(단위: %)

구분	표본수(가구)	도입 필요	도입 불필요	무응답
전체	1,000	78.7	18.0	3.3
애완동물 소유자	172	72.7	23.8	3.5
애완동물 비소유자	828	80.0	16.8	3.3

○ 판매업자 등록제의 도입여부 및 도입방안

- 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2002년 9월에 공고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제5조의1(애완동물판매업)에서도 신고의무, 시설기준, 질병예방접종,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개나 고양이를 취급하는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해서 등록하고 자치구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하면 판매업자는 등록증을 업소에 게시함.

16) 판매업소 측면에서는 오히려 업소등록이 편리한 제도라 할 수 있음.

- 신고시의 필요서류는 ①사람 또는 명칭, 주소,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사육시설을 설치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주요 취급동물의 종류 및 수, ④사육시설의 구조 및 규모, ⑤사육시설의 관리방법, ⑥사육시설의 배치도 및 인근지역의 지도 등

나. 애완동물 소유자의 등록제

○ 서울의 애완동물 사육 현황

- 2장에서 기술하였듯이 현재 서울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가구수는 약 64만 가구로 추정됨.

○ 소유자 등록제의 목적

- 계획적인 동물의 취득에 의해 종생사육의 토대를 마련함.
- 분실 또는 탈주동물의 회수를 용이하게 함.
- 동물의 유기를 예방하여 생활환경, 위생, 동물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함.
- 등록비의 징수를 통해 유기동물의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함.

○ 외국의 사례

- 일본,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일반적인 등록과는 별도로 미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위험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으로 등록으로 관리가 되며, 위험개에 대한 기준¹⁷⁾은 국가, 지역, 자치단체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위험개는 일반개보다 많은 등록비를 지불하고 있음.
- 공통적인 사항은 등록제가 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고양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17) 미국 오레곤주 더글러스 카운티에서는 사고경력 등을 감안해 위험개, 잠재위험개, 가해력이 있는 개로 분류하고 있음. 독일은 품종으로 분류하는데 핏볼테리어, 어메리칸 스타포드셔어테리어, 스타포드셔어볼테리어, 불테리어 등은 국가에서 위험개로 지정하였고, 각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위험개를 지정할 수 있음. 예를들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경력이 있는 개나 그러한 목적으로 훈련된 개 그리고 어깨 높이 40cm이상의 개 및 몸무게 20kg이상의 개는 위험개에 추가되고 있음. 호주에서는 경비견과 개나 사람을 공격한 경력이 있는 개를 위험개로, 뉴질랜드도 호주와 유사한 기준으로 위험개를 지정함(김수진, 2003).

○ 애완견 등록제에 관한 서울시민의 의견

- 1,000가구의 표본 중 63%가 애완동물 소유자의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사육여부에 따라서 애완동물 소유자의 42%, 애완동물 비소유자의 67%가 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함.

<표 4.3> 판매업자 등록제에 관한 서울시민의 의견

(단위: %)

구분	표본수(가구)	도입 필요	도입 불필요	무응답
전체	1,000	63.1	32.5	4.4
애완동물 소유자	172	42.4	52.9	4.7
애완동물 비소유자	828	67.4	28.3	4.3

○ 소유자 등록제의 도입여부 및 도입방안

- 궁극적으로 애완동물 특히 개에 대한 소유자의 등록제는 도입되어야 함. 등록제는 등록제의 도입목적에 적시하였듯이 많은 애완동물의 관리와 보호에 가장 확실한 효과에 있는 방법이기 때문임.
- 소유자의 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 설치, 행정전산망 구축, 애완견 사육자들의 사육지속성에 대한 재검토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함으로 유예기간을 충분하게 두고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위험개에 대해서는 먼저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은 모든 경비견(군사용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제외), 골든리트리버, 그레이하운드, 도베르만, 래브라도리트리버, 와이마리너, 버니즈 마운틴 독, 콜리, 자이언트 슈нау저, 아프칸 하운드, 올드잉글리쉬 쉬프독, 포인터 일글리쉬, 세터 아이리시 독, 로디지안 리즈백, 포인트와이어 헤어드, 포인트 저먼 쇼트헤어드, 달마시안, 바셋하운드, 벨기에 말리노이즈, 불테리어, 살루키, 시베리안 허스키, 스파니엘 잉글리쉬 스프링거, 차우차우, 에어테일 테리어, 세터 잉글리시, 불독, 진돗개, 풍산개, 삼살개 등과 어깨 높이 40cm 이상, 몸무게 20kg 이상의 개를 위험개로 지정함.

- 취득일로부터 30일(생후 90일 이내의 개를 취득한 자는 생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이내에 사육주가 거주하는 관할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며 자치단체장은 사육허가증을 발부함.
- 제도의 실효성과 애완견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공간을 고려하여 등록은 시(市)급이상의 도시에서만 실시하며, 소유자나 소재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변경 신고함. 애완견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함.
- 필요서류는 ①사육주 이름과 주소, ②견종, ③예방접종 증명서 그리고 사망시에는 ④사망일시 및 사체처리방법 등임. 사육과정에서 예방접종기록은 동물병원에서 관할 관청으로 직접 통보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별도로 정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등록제의 근거를 마련(애완동물보호관리법이 제정된다면 그곳에서 규정)함.
- 위험개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든 애완견 전반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든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이 제도에 대한 참여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행정처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 애완동물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개에 대해서 개체별 인식기(일명 마이크로칩)를 이식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구매자 거주 자치단체에 통보함에 의해 등록이 완료되는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등록경로는 자치구와 판매업소로 이원화되며, 판매업소는 등록비를 징수하여 자치구에 입금시켜야 함. 판매업소 개체별 인식기 이식방법은 동물보호법에 판매업소의 책무사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음.

다. 출입규제지역의 지정

○출입규제 현황

- 국립공원 등 : 출입금지(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 조례상의 도시공원 : 목줄착용, 배설물수거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건부로 허용(도시공원법 관련 도시공원의애완동물출입관련규정)하며, 서울시민의 94%(애완동물 소유자의 경우도 87%)가 이 제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버스·택시 : 불편감을 주지 않는 동물 승차 가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

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 지하철 : 시각장애인용 인도전만 탑승가능(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5조)
- 기차 : 나쁜 냄새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휴대 불가(철도법 18조)
- 기타 : 동물원은 출입금지, 비행기는 탑승금지됨.

○출입규제구역 지정의 목적

- 산림지역의 경우 야생동물을 보호함.
- 공원 및 대중교통 수단 : 이용객 또는 동승자에 대한 불쾌감 유발과 배설물 방치 방지
- 음식업소 등 : 식품의 위생 확보
- 초등학교 등 : 어린이 상해 사고 방지

○외국의 사례

- 미국 : 식당, 일반상점, 대형도소매업 등 위생문제와 관련이 있는 곳은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함.
- 독일 쾰른시 : 식물원, 산림원, 조류관찰장, 야생공원, 공원잔디밭, 공공녹지안의 놀이터, 축구장 등에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함.
- 호주 : 어린이보호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운동장에는 출입을 금지하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는 운동시간에만 출입을 금지함.

○출입규제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

- 전체적으로 90%의 시민이 음식점이나 백화점 등 위생관련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애완동물의 출입규제에 동의함. 애완동물 소유자의 82%도 이러한 지역에 대한 출입규제를 찬성함.
- 현재의 조례상 도시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갈 때 목줄이나 개 배설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적용범위를 주택가의 어린이놀이터까지 확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75%, 애완동물 소유자의 58%가 찬성함.

<표 4.4> 음식점, 백화점 등 출입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

(단위: %)

구분	표본수(가구)	규제 필요	규제 불필요	무응답
전체	1,000	89.9	10.1	0
애완동물 소유자	172	82.0	18.0	0
애완동물 비소유자	828	91.5	8.5	0

○ 출입규제구역 지정방안

-식품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금지가 필요한 지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제2호,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제1호에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등 대규모 점포 중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2, 3, 5, 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기타 식품위생과 관련된 건물 또는 업소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식품의 위생확보를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하는 곳

-어린이의 안전확보를 위해 애완동물(또는 위험개)의 출입금지가 필요한 지역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중 놀이방 및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 기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개인 또는 법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지역

-개의 목줄이나 배설물 회수가 필요한 공원

- 조례상의 도시공원
- 주택가의 어린이놀이터를 포함시키고 관련 조례 개정

-동물보호법에 애완동물 출입금지구역의 지정근거를 마련(애완동물보호관리법

이 제정된다면 그곳에서 규정)함.

라. 광견병 등 예방접종 시행 정착

○ 예방접종 실태

- 애완동물은 다양한 질병에 감염될 수 있으며 이중 광견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제2종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애완동물의 예방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접종대상임.
- 광견병 예방주사는 생후 3개월 내에서 1회 접종하고 매 6개월마다 추가 접종하도록 되어 있으며¹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린 예방접종 명령이나 접종증명표시 명령(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을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동법제60조).
- 서울시는 매해 2회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애완동물과 같은 동물의 경우 사육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서울시의 경우도 예상사육두수의 45% 해당하는 개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나머지 자을 접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등 광견병 예방접종을 위해 관련법에서 규정된 접종명령, 불이행시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음.
- 설문조사에서 애완동물 사육자의 92%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지만 규정된 시기에 규정된 회수로 투입하고 있는 소유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 사육자들 스스로의 응답임.

○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의 목적

-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을 통하여 사람과 동물의 감염 및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방지함.
- 특히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는 광견병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이 필요함.

○ 외국의 사례

- 일본 : 등록된 모든 개는 매해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그 증명서를 개에게 표시하여 함. 등록증도 함께 표시함.

18) 수의사단체에서는 종합예방주사(DHPPL)를 생후 6주에서 8주부터 3주 간격으로 3~5회 접종하고 그 후에는 매년 1회 접종으로 가능하다고 함.

- 기타 : 미국 등 애완동물의 등록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광견병 등 개의 질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접종증명서를 개에 표시해야 함.

○ 예방접종에 관한 서울시민의 의견

- 예방접종 증명서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 응답자의 89%가 증명서 부착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애완동물의 사육자들 중 74%도 접종증명서의 부착에 찬성함.

<표 4.5> 예방접종 증명서 부착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 (단위: %)

구분	표본수(가구)	부착 필요	부착 불필요	무응답
전체	1,000	88.8	11.0	0.2
애완동물 소유자	172	73.8	26.2	0.0
애완동물 비소유자	828	91.9	7.9	0.2

○ 광견병 예방접종 시행 정착 방안

- 일본에서는 1957년이후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광견병예방접종과 그 증명서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실과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지역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1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광견병예방접종과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광견병을 주기적으로 접종하는 명령과 표식의 부착을 명령(제15조제1항)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동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6조3항관련 별표2)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이용하면 현재의 상태에서도 광견병의 예방접종과 증명표식의 부착은 가능함.
-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도 “서울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 “서울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로 확대 제정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접종명령과 표식부착명령을 조례에 담고 광견병의 정기적인 접종을 유도할 수 있음.
- 그러나 애완동물에 대한 개체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견병 예방접종규정은

올바른 접종과 접종확대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결국 일본¹⁹⁾과 같이 개의 등록증 및 예방접종증명서 부착이 동시에 의무화되어야 그 실효성이 있을 것임.

-동물보호법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광견병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에 소유자의 책무로 규정해서 그러한 법률이 별도로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마. 동물사체 처리체계 구축

○ 동물사체 처리현황

-애완동물의 사체는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경우 감염성폐기물로서 환경부로부터 허가받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 생활폐기물과 함께 소각되거나 매립할 수 있음.

-그러나 애완동물을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육주는 주변의 적당한 장소에 매장하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전국에서 동물의 사체를 감염성폐기물이 아닌 개별사체형태로 소각할 수 있는 허가업체는 대구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묘사업소 뿐이며, 그 외에는 동물사체를 화장할 수 있는 허가업체가 없음.

○ 동물사체 처리체계 구축 목표

-애완동물처리업을 육성하여 애완동물사체의 부적절한 매장을 억제함.

-애완동물 사체의 소각을 유도하여 매립 등에 의한 환경부하를 억제함.

○ 동물사체 처리에 관한 외국의 사례

-미국 : 국토가 넓어 주로 비용이 저렴한 매장에 의존함.

-일본(동경도) : 생활폐기물 처리조직이 수거하거나 8개소의 전문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화장시킴. 생활폐기물처리조직이 수거할 경우에는 사체 1구당

19)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광견병예방법에서는 등록과 광견병예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 소유자는 등록증과 접종증을 동시에 개에 부착해야 함. 만약 등록을 않거나 등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접종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2,600엔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쓰레기소각시설에 설치된 동물사체소각로에서 별도로 처리됨(동경도청소국, 1999). 전문처리업체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소각재의 회수나 개를 위한 장례 등의 위탁이 가능함.

-프랑스 파리 : 사설장례장과 공공장례장이 있음. 사설장례장은 화장처리된 동물의 재를 반환해주며, 공공장례장에서는 화장재를 반환해주지 않음(신미란, 2003.)

<표 4.6> 우리나라 애완동물 사체처리 관련규정 및 적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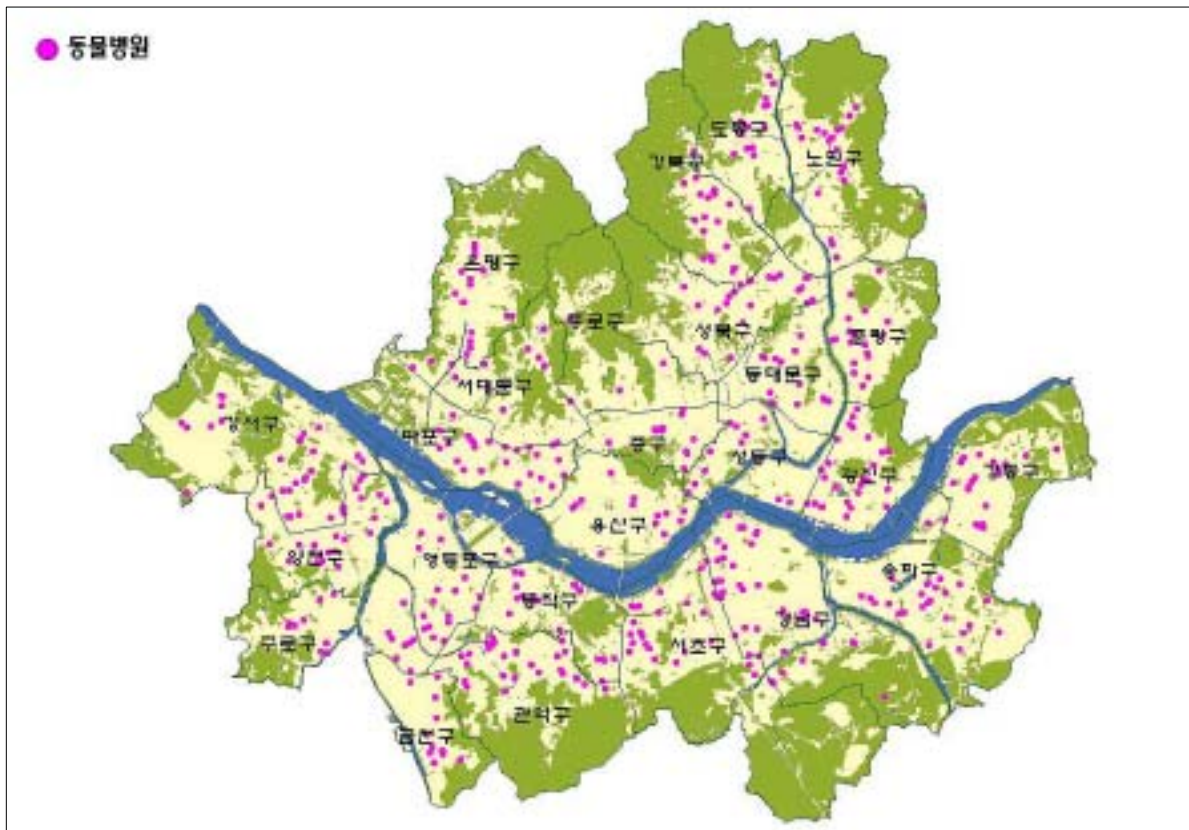
구분	법규정	적용현황
일반가정등에서 사체발생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 쓰레기봉지등에 담아 처리 • 민간애완동물장례업체에 위탁 : 15만원~70만원(무허가시설)
	• 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 외 매립 금지(폐기물관리법 제7조)	• 야산이나 공원 등 적당한 장소에 매립 • 수원시 : 한시적으로 화장장 1개화로 애완동물 소각허용(2002.3.11~8.8) • 대구시 : 화장장 1개화로 애완동물 소각허용(30kg 이상 동물 9만원, 30kg 미만 동물 5만 5천원)
	• 공유수면에 동물사체 유기금지(공유수면법 제15조)	• 사례 확인 곤란
	• 공공수역에 동물사체 투기금지(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 사례 확인 곤란
동물병원에서 사체발생	•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	•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공설묘지 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일정한 장소에 1m이상의 깊이로 매몰하거나 화장장에서 소각(장사 등에관한법률 제15조)	• 사례확인 곤란 • 수원시 : 한시적으로 화장장 1개화로 애완동물 소각허용(2002.3.11~8.8) • 환경부 : 2002.8.8까지 허용하고 그 후에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규정

○ 동물사체 처리체계 구축 방안

- 지정폐기물에 동물사체를 별도로 분리하고 감염성폐기물의 처리업과는 별도의 “애완동물처리업”을 신설하여 이 업체는 화장재의 회수를 원하는 소유자들의 애완동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함. 이 경우 현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인 시간당 2톤 이상의 시설규모를 그대로 애완동물처리시설에 적용하게 되면 그 규모가 너무 크게 됨(시간당 2톤은 애완동물의 평균 무게 4kg을 고려할 때 시간

당 500마리를 처리할 수 있음).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사람과 애완동물의 신체 차이를 감안한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함.

- 현재 허가를 받지 않고 애완동물장례업을 이용하는 경우 1마리당 15만원~70만원의 위탁비용이 들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애완동물처리업이 만들어지면, 전국에 고르게 형성되어 그 비용은 많이 낮아질 수 있을 생각됨.
- 애완동물의 화장재를 원하지 않으나 애완동물의 소각을 원하는 사육자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유도함. 전국에는 14개소의 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와 126개소(서울소재 27개소)의 수집운반업자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집운반비 1kg당 1천원, 처리비 4천원(2천원~6천원) 등 4kg의 애완동물 처리에 2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개인이 처리업자와 계약할 수는 없으므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531개소의 동물병원(2004년 5월 4일 현재)을 통하여 위탁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이 경우 사체의 보관비용 등을 감안할 때 1구당 5만원 수준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이상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애완동물의 사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같은 경로로 배출하여 소각 또는 매립되게 함.



<그림 4.3> 서울시 동물병원 분포현황

4.4 유기동물 관리방안

가. 관련 규정

- 유기동물의 정의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동물보호법제7조제1항, 서울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제2조제1호)
- 유기동물의 포획책무 : 시장, 군수, 구청장(법제7조제1항, 조례 제4조제1항)
- 보호사실의 공고(1월) : 시장, 군수, 구청장(제7조제2항, 조례제5조)
- 보호소 또는 위탁보호 : 구청장(조례제6조)
- 보호동물의 기증 : 시장, 군수, 구청장(법제7조제4항, 서울시조례제7조)
- 위탁비용 지급 및 보호비용 징수 : 구청장(법제7조제5항, 조례제9조)
- 보호소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 시장(조례제10조)

나. 서울시 유기동물관리 실태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들이 2003년에 포획한 유기동물은 7,389두이며 전년대 117% 증가함.
- 포획된 동물은 1달(30일)간의 공고(서울시동물사랑홈페이지 : animal.seoul.go.kr) 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 10일 동안 새로운 입양자나 기증처를 찾고 나머지 동물들은 안락사 등의 방법에 의해 처분됨.
- 각 자치구들은 자체적인 동물보호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22개 자치구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경기도 양주시 남면)에 포획 또는 보호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자치구는 공공수의사 등에게 개별로 위탁하여 보호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경우 2003. 1~5월 기간에 포획된 동물의 2.4%를 소유자에게 인계하고, 8.9%를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하였으며, 나머지 89%는 안락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다고 함²⁰⁾.
- 보호에 소요된 비용은 위탁기관과 계약에 의해 지불되며 서울시에서 약 50% 정도를 보조함. 2004년의 연간위탁금액 7~8억원으로 예상됨.

20) 은평구의 유기동물을 보호를 위탁받은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2003년에 유기동물의 61%를 입양 등의 방법에 의해 처리하였다고 함.

다. 현재 유기동물의 보호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

-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동물사육억제를²¹⁾, 대부분의 자치구내에서 동물사육을 억제하는 조례와 주민동의 절차 등에 의해 사실상 입지가 불가능한 상태임²²⁾.
- 22개 자치구와 위탁보호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보호소가 서울에서 평균 4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유기동물의 운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입양 등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음.
-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고기간(1달)이 너무 길어 보호공간의 부족과 과도한 비용을 소모하고 있음. 일본 동경도의 경우 공공기간은 2일 프랑스 파리의 경우 시(市)동물보호소의 보호기간은 8일임.
-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치료, 입양, 처분 등의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입양 등의 동물보호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보장하기 어렵고, 자치구들의 재정적인 여건에 의해 충분한 위탁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종사자의 이직과 사체 매립처리(불법은 아님) 등이 일어나고 있음.
- 동물보호소(위탁시설 포함)의 시설 및 관리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유기동물들이 적절한 보호를 보장받기 어려움.
- 법 및 서울시의 조례에서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계자체만으로도 보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보호비용의 청구사례는 사실상 없음.
- 입양된 유기동물도 입양자의 조건 등을 확인할 여유가 없이 입양이 이루어져 이들이 적절하게 동물을 사육하고 도중에 사육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보장받기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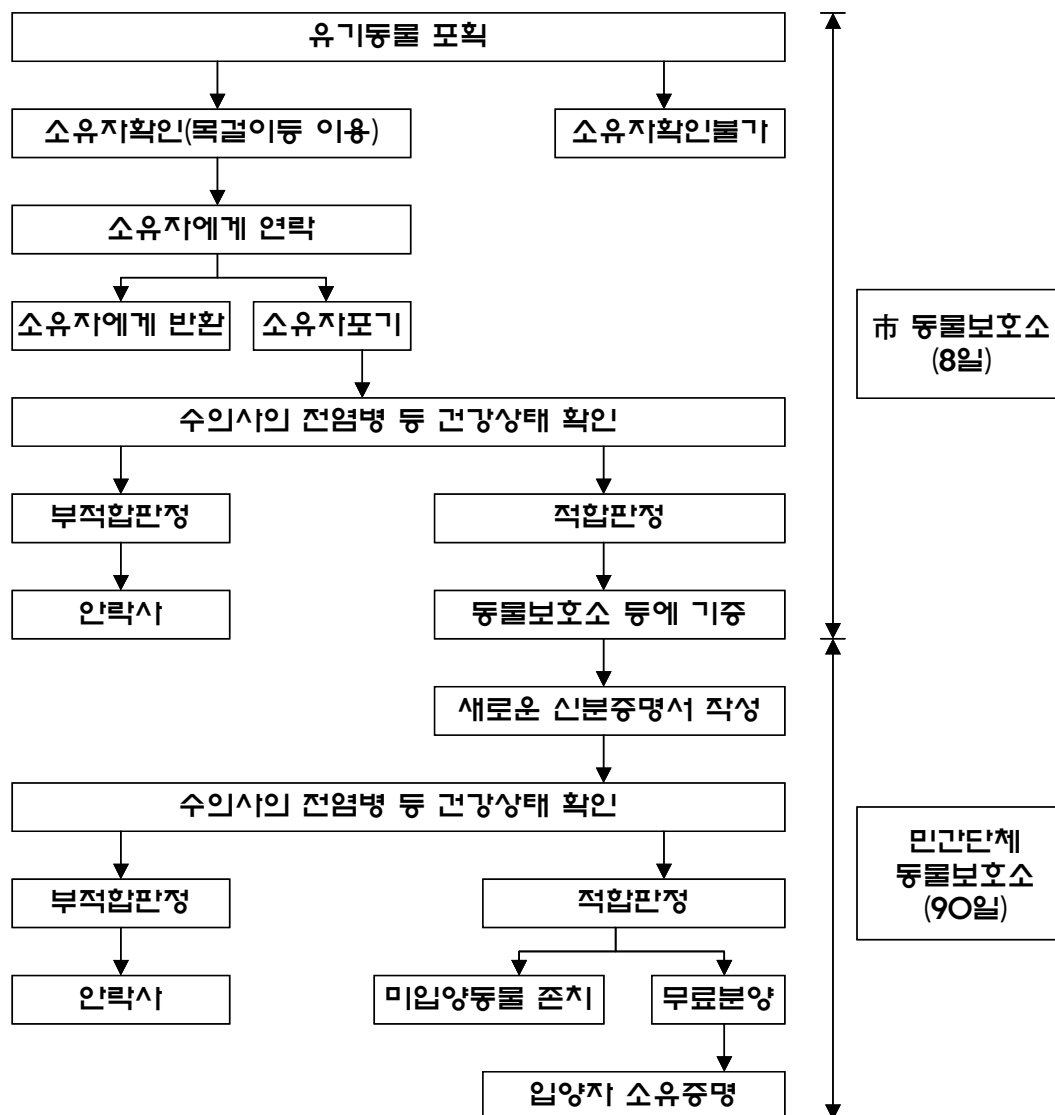
라. 외국의 사례

- 프랑스(파리) : 포획된 유기동물은 시 수의과 산하의 동물보호소로 이송되고

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예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관련 별표1에 따르면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축사, 닭골시설 및 장례식장,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은 입지할 수 있으나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은 입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22) 서울시는 동물보호소를 설치하기 위해 2001년에 7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대공원, 4개 하수처리장, 현재 가축사육이 가능한 강서구, 서초구, 서울소재 동물관련학과 보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설치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동물질병전염, 공간부족, 행위제한, 민원, 비용분담문제 등의 이유에 의해 결국 건설을 포기하고 예산을 불용처분함(서울특별시 내부자료).

이 곳에서 휴일을 제외한 8일간 보호하면서 목걸이 등을 이용해 소유자에게 연락함. 소유자가 나타나면 보호비용을 징수한 후에 돌려주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의사가 판단하여 허약한 동물은 안락사시키고 건강한 동물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장 큰 단체는 SPA)에 기증함. 민간동물보호소에서 다시 검진을 실시하여 부상, 질병, 노령 동물은 안락사 되고 나머지는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됨. 입양자는 까다로운 입양조건을 서약하고 6개월 이내에 보호소로부터 사육상태를 점검 받아 문제가 있으면 입양이 취소됨. 입양비는 증명서발급과 예방접종에 개 100유로, 고양이 60유로, 불임수술에 개 200유로, 고양이 70유로가 부과됨.



<그림 4.4> 프랑스 파리시의 유기동물 보호체계

- 미국(뉴욕) : 뉴욕시에서는 2003년에 4만7천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함. 유기동물을 취급하는 보호소는 NYACC이며, 이 보호소는 뉴욕시와 계약에 의해 유기동물의 포획, 보호, 입양, 찾아주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각 자치구마다 보호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능력은 5만마리이고, 뉴욕시의 지원비, 입양비, 기타 민간기업으로부터의 후원금 등에 의해 운영됨(www.nyacc.org).
- 일본(동경도) : 동경도에는 동물의 보호, 상담, 교육 등과 관련하여 5개소의 사업소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동물취급업허가관리, 유기동물 보호, 유기동물 입양, 유기동물 치료, 특정동물 허가 등의 업무중에서 2~4가지를 업무를 수행함. 이중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은 2개소, 치료하는 시설은 1개소, 분양을 담당하는 시설은 2개소,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 개와 고양이를 받아주는 곳은 1개소임. 포획된 동물은 2일간 공고(동경도조례 제37조)하고 7일간 사육관리하며, 부상동물은 14일간 치료·관리함.

마. 유기동물관리 개선방안

- 동물보호소의 확충 : 현재 22개 자치구의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특히 동작, 구로, 금천, 구로, 관악구 등과는 50km이상의 거리에 있음. 따라서 이들 자치구들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 적어도 2개 이상의 보호소를 운영함으로써 자치구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포획, 수송, 분양, 반환 등이 편리해지도록 해야 함. 만약 서울시의 자체적인 확보가 어렵다면 인근 경기도의 시설이나 민간시설의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위탁비용의 현실화 : 민간에게 보호위탁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제5조의 적절한 사육·관리, 제8조의 동물의 도살방법 등이 적절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실제적인 비용이 지급되어야 함. 서울시는 매해 상반기에 전년도에 운영비내역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익년도의 위탁비용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조례에 “위탁비용검토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비용의 현실화는 안정된 보호시설을 확보하고 유기동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위탁비용의 항목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 : 포획(계약에 포함될 경우), 수송, 동물의 관리 및 치료, 기타 일반행정에 소요되는 인력의 인건비 및 각종 법정 비용
- 치료비 : 부상동물 및 감염동물의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검사비, 예방접종비, 수술비, 피부치료비, 안락사의 경우 약품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료비 : 유기동물의 급이에 필요한 사료비
- 장비 등 유지비 : 차량 및 장비의 연료비와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수도료, 전기료 등
- 감가상각비 : 차량, 장비, 건물 등의 감가상각비
- 사체처리비

-동물보호소의 분양기준 강화 : 동물보호소에서 단순하게 보호기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측면에서 보호동물을 분양하는 것은 또 다시 유기동물을 양산하고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일본 동경도 및 파리시와 같이 종생사육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만 분양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양수자로 결정해야 할 것임.

- 20세 이상일 것
- 공동주택이 아닐 것
- 가족 모두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제출할 것
- 종생사육, 번식제한, 적정사육, 법규준수 등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할 것
- 사육방법에 관해 담당자로부터 교육을 받을 것

-동물분실자에 대한 보호비용 청구 : 동물을 분실할 경우 반환 받을 때는 그 기간에 소요된 동물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동물보호법 제7조제5항, 서울시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는 자치구는 없음. 등록제가 도입되고 정착되어야 할 이러한 규정도 집행이 가능하겠으나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야함. 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text{보호비용} = (\text{전년도계약비용-사체처리등의 비용}) \div (\text{계약일수} \times \text{보호동물수}) \times \text{해당동물 보호일수}$$

-유기동물보호기간의 단축 :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유기동물 보호사실의 공고기간은 1월(제7조제3항)임. 동경도의 경우는 2일 공고 7일 사육이며, 프랑스 파리는 공휴일을 제외한 8일임. 우리나라의 경우 공고 1개월, 10일 이상의 분양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보호기간은 40~50일에 이르며, 이러한 이유에서

유기동물 1마리당 2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함. 10여일이 경과하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실효성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휴일을 제외한 순수 공고기간을 10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의 개정이 필요함.

-동물보호소 운영규정 마련 :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소의 역할이나 운영규정이 없어 유기동물들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보장하기 어려움. 동물보호법에서 운영방법 및 시설기준을 지침이나 고시의 형태로 마련해야 하며, 그 내용들은 “4.3절 판매업자의 책무”에 사육시설의 구조를 구체화하고 부상동물의 치료와 같은 기능을 부가해야 할 것임. 운영규정에는 개와 고양이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할 때 중성화수술 등 번식제한 조치 강구할 것을 포함해야 함.

-유기동물의 감시체계 마련 : 유기동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포획하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감시체계가 필요함. 현재 각 자치구는 자율청소봉사단 등을 운영하며, 환경단체 등도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협조를 얻는 방법을 강구함.

-사체의 소각처리 :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감염성폐기물로서 사체를 처리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소에서 비용절약을 이유로 매립하고 있음.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하가 큰 매립보다는 소각처리방법을 선택해야 함.

-서울시의 역할 강화 :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에 대한 모든 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유기동물의 보호, 보호시설의 공고, 시설확보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자체적으로 보호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서울시 각 자치구들의 현실임.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7조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통책무로 규정하고 시도지사에게는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나 자치구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기동물의 소유자 확인과 분양에 필요한 공고 및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함.

4.5 교육 및 홍보

가.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과 실태

○ 필요성

- 생명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사육방법을 전달함.
- 부적절하게 사육했을 경우의 피해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고지시킴.
- 애완동물의 사육자에 대한 비사육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함.

○ 실태

- 동물보호법 제4조에 동물보호운동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책무(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단체에게 동물보호운동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강구)가 부여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사례는 없음.

나. 외국의 사례

- 일본 : 동물애호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동물사랑주간(9월 20일~26일)을 두고 이 기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지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기동물을 양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개최하는 강습회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함.
- 미국 :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들이 주관하여 패션쇼, 용품바자회, 강습회 등이 열리고 있음.

다. 교육 및 홍보 방안

○ 동물보호주간 설정

- 동물보호주간의 설정 :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주간을 설정하여 동물사랑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를 위한 교육체계

- 교육대상 : 유치원 및 초등학교 3학년 이하
- 교육 목표 : 종생사육의 계획하에 사육을 결정하며 동물을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시킴.

-교육의 내용

- 동물의 사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 사육장소, 부모의 동의, 역할분담, 동물에 대한 할애시간, 역할분담, 사육비용, 이웃에 대한 배려 등
- 동물을 사육할 때의 일 : 일상적 돌보기(사료주기, 대소변가리기, 털빗기기, 운동시키기 등), 주기적 돌보기(먹이 및 간식 구입, 예방접종 및 검진, 목욕 및 털깎기), 외출할 때의 요령(인식표걸기, 안전장구갖추기, 목줄잡기, 배설물회수용기 갖추기, 들어가는 안되는 곳, 타서는 안되는 교통수단 등), 휴가갈 때의 요령(업체에 맡기기, 주위에 부탁하기, 운반중의 유의사항 등)
- 동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였을 때의 문제점 : 환경적 문제점, 위생적 문제점, 이웃에 대한 피해, 유기동물의 발생 등

-교육방법 : 서울시에서 전문직 강사를 고용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위탁함. 동물보호단체에 위탁할 때는 공모를 통해 교육제안서와 사업비를 평가하여 선정

○ 사육자를 위한 교육체계

-교육대상 : 사육자, 사육을 원하는자, 동물보호센터에서 양도를 원하는 자

-교육목표 : 적절한 사육 및 유기방지

-교육의 내용

- 동물질병 및 예방에 관한 정보
- 사육방법
- 사육자가 알아야 할 관련 법규

-교육방법 : 참가자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하고 공모를 통해 제안서와 사업비를 비교하여 선발함.

○ 사업추진 토대 마련

-서울시조례에 동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함.

4.6 애완동물의 관리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체계

가. 판매업자 책무 강화 부분

사업내용	방법	역할분담
• 판매업자 책무 명문화	• 동물보호법/농림부령에 추가 • 서울시조례에 추가	• 정부 : 관련법 또는 영 개정 • 서울시 : 조례 개정
• 등록제 도입	• 동물보호법 개정	• 정부 : 관련법 개정 • 서울시 : 개정 건의

나. 애완동물 사육자 책무강화 부분

사업내용	방법	역할분담
• 소유자 책무 명문화	• 동물보호법/농림부령에 추가 • 서울시조례에 추가	• 정부 : 관련법 또는 영 개정 • 서울시 : 조례 개정
• 소유자 등록제 및 인식표 부착	• 공청회 • 동물보호법 개정 • 인식표 제작 • 시범사업/위험개 우선추진	• 서울시 : 법개정 건의 • 정부 : 공청회/법 개정 • 서울시 : 인식표제작 • 자치구 : 인식표배포/시행
• 광견병예방접종 강화 및 증명서 부착	• 가축전염병예방법 활용 • 증명서 제작	• 서울시 : 증명서 제작 • 자치구 : 배포 및 시행 • 동물병원 : 배포홍보 협조
• 중성화수술 및 공동주택일 때 성대수술	• 판매자가 판매시 구매자에게 권장	• 정부 : 판매자와 사육주에게 권장하거나 판매자와 사육주에게 책무로 명시

다. 공공안전 확보 부분

사업내용	방법	역할분담
• 출입금지지역 지정	• 동물보호법 추가 • 서울시조례에 추가 • 금지스티커 배포	• 정부 : 관련법 또는 영 개정 • 서울시 : 금지스티커제작/조례 개정 • 자치구 : 스티커배포
• 위험개 지정	• 위험개 분류 • 동물보호법 개정	• 서울시 : 법개정 건의 • 정부 : 법개정
• 동물사체 처리기반 확대	• 애완동물처리업 신설 • 시설기준 마련 • 동물병원 협조요청	• 서울시 : 업신설/법개정건의 • 정부 : 법개정/시설기준 마련 • 동물병원 : 협조

라. 유기동물 관리 강화 부분

사업내용	방법	역할분담
• 동물보호소 확충 : 남서부권역을 담당하는 1개소 확충	• 직영보호소의 가능성 검토 • 경기도시설 활용방안 강구 • 민간보호소 설치 지원	• 자치구 : 부지 조사 • 서울시 : 건설 및 위탁운영/경기도시설 가능성 검토/민간보호소모집 및 건설지원 • 보호단체 : 보호소 건설 추진
• 위탁비용 현실화	• 비용검토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위탁비용 산정 • 서울시조례에 내용 추가	• 서울시 : 조례개정 • 보호소 : 비용분석자료 제시 • 자치구 : 위탁비용 활용
• 유기동물 분양기준 강화(분양시 중성화수술 등의 요구 포함)	• 조례로 분양기준 마련 • 동물보호소 운영 및 시설기준 마련	• 서울시 : 조례개정 • 정부 : 운영시설기준 마련
• 동물 분실자 보호비용 청구	• 청구기준 구체화	• 서울시 : 조례개정
• 유기동물 보호기간 단축 : 현재 1월에서 순10일	• 동물보호법 개정	• 서울시 : 개정건의 • 정부 : 동물보호법 개정
• 유기동물 발생 감시체계 구축	• 각 자치구의 자율청소봉사단 및 환경단체의 환경감시단의 협조를 구함	• 서울시 : 환경단체 환경감시단 협조요청 • 자치구 : 자율청소봉사단 활용
• 서울시 역할 확대	• 모든 유기동물처리업무에 공동책임 • 소유자확인/공고/분양 협조 • 민간부분에도 시설비 지원	• 정부 : 동물보호법 개정 • 서울시 : 시조례 개정

마. 교육 및 홍보 강화 부분

사업내용	방법	역할분담
• 동물사랑주간 설정	• 동물사랑주일을 설정해서 적절한 홍보활동 전개	• 정부 : 동물보호법 개정 • 서울시 : 사업발굴 행사추진 • 보호단체 : 행사협조
• 어린이교육	• 유치원, 초등학교 순회교육 • 보호단체에게 위탁	• 서울시 : 사업비 지원/ 조례에 근거 마련 • 보호단체 : 프로그램개발 및 참여
• 소유자 교육	• 주기적 자원교육 • 보호단체에게 위탁	• 서울시 : 사업비 지원/ 조례에 근거 마련 • 보호단체 : 프로그램개발 및 참여

바. 법규 체계의 전반적 정비

사업내용	방법	역할분담
• 애완동물법 제정 또는 동물보호 및 관리법으로 확대개편	•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애완동물법을 제정 • 불가능하면 동물보호법의 대폭적인 수정	• 정부 : 새로운 법제정 또는 기존법을 검토하여 대폭적인 수정
• 서울시조례를 동물보호및관리조례로 확대	• 현조례의 내용을 사육자책무, 판매자책무, 타법규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확대·수정	• 서울시 : 검토를 통한 확대 및 수정

■ 참고문헌

▶국외문헌◀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AVMA), 2002, 「U.S. pet ownership and demographics source book」, Center for Information Management.

Elizabeth A.C. and Andrew N.R., 2003, Companion Animal Demographics in the United States:A Historical Perspective, The state of the Animals II, pp.9~26.

Johnson, T.P., T.F. Garrity, and L. Stallones, 1992,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Lexington Attachment to Pets Scale, Anthrozoos 5(3) : 160~175.

東京都動物保護相談 Center, 1999. 事業概要.

東京都動物保護相談 Center, 2003, 事業概要.

東京都清掃局, 1999, 事業概要.

※ 국외관련법

<미국>

Public Law 101: Food,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Trade Act of 1990-Protection of Pets

Public Law 99: Food and Security Act of 1985-Animal Welfare Act

Protection of Pets

Animal welfare Act

<영국>

Welfare of Farmed Animals Regulations 2000

Pet Animal Law

Control of Dog Order

Dog Licences Act

Dangerous Dogs Act

Dogs Fouling of Land Act

<독일>

Tierschutzgesetz

Tierschutz-Hundeverordnung

Gesetz zur Bekämpfung gefährlicher Hunde

Gesetz zur Halten von Hunde Hundelhaltungsverordnung

<호주>

Animal Welfare Act 1992

Animal Care and Protection act 2001

ACT Dog and Cat Laws

The Domestic Animal Act 2000

<일본>

家庭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狂犬病予防法, 施行令, 施行規則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施行令, 施行規則

東京都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条例, 条例施行規則

▶국내문헌◀

김수진, 2003, 애완견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두산대백과사전.

신미란, 2003, “애완견의 위생·안락·보호 등 애완견권리 중요히 여겨”, 집중기획④ 미국·프랑스의 애완견실태, 소비자시대.

유현숙, 2003, “애완견의 위생·안락·보호 등 애완견권리 중요히 여겨”, 집중기획④ 미국·프랑스의 애완견 실태, 소비자시대.

천병호. 1994, “해외입법: 동물보호법”, 『입법조사월보』. pp. 176~192.

통계청, 1980, 1985, 1990, 1995, 2000, 인구총조사.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파리사무소, 2003, 버려진 애완동물관리 및 보호관련 자료 통보.

※ 국내관련법

축산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사료관리법

농림부고시 제2003-4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폐기물관리법

매장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주택법 시행령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조례

동물보호법개정(안)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도시공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서울특별시조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철도법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인정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수질환경보전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인터넷검색사이트◀

<http://animals.or.kr> (동물자유연대)

<http://jorei.cne.jp/> (일본 동물관련법 모음 사이트)

<http://koreaanimals.co.kr> (동물보호협회)

<http://legal.seoul.go.kr/main/html/index.php> (서울시 자치법규 시스템)

<http://www.gangnam.go.kr/animal/index%201.htm> (강남구청사이버동물보호센터)

<http://www.kaap.or.kr> (한국동물보호연합)

<http://www.kaha.or.kr> (한국동물병원협회)

<http://www.kimpodog.co.kr>(애완견판매소)

<http://www.lets114.co.kr>(한국통신전화번호안내)

http://www.maf.go.kr/asp/05_data/data05_01.asp (농림부 농림자료실 농림법령)

<http://www.mmjp.or.jp/yokojyuu/low/> (일본 동물관련법 모음 사이트)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nycacc.org>(The Center for Animal Care and Control)

<http://www.seoul.go.kr/life/life/animal/index.html> (서울시청동물사랑방)

<http://www.withanimal.net/>(아름품)